與, 대주주 기준 내부 공방에 … 정청래 "발언 자제" 진화

민주 최고위…과세 범위 '50억→10억' 의원간 찬반 분분
정 대표 "A안·B안 검토해 곧 입장 정리"…30억 절충론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 등 10여 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정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준 재검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이라 최대한 조속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의도 브리핑

이개호·서삼석·전진숙 "정부, 비 피해 지원을"

이개호 의원

서삼석 의원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전진숙(북구을) 의원이 전남도와 광주시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지역 사회 및 정부, 지자체의 집중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70~90% 정도의 보상을 통해 일정수준의 복구와 회복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를 예측해 영세 서민이나 상인들이 이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극한 호우로 인한 풍수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무안과 함평, 광주지역에서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서민들과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을 제안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 영세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검찰 개혁' 민형배·'언론 개혁' 최민희·'사법 개혁' 백혜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 3대 개혁 특위원장 임명…당 대변인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권향엽(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에 각각 선임됐다.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민형배 의원

권향엽 의원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인사로, 서울 강서구병이 지역구인 4선이다.

또 정 대표는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의원, 대변인에 여성인 권향엽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경기 고양시정) 의원 등을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호남·경남 폭우 피해, 신속 대책 마련"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尹 속옷 난동 기막혀…법의 철퇴 내려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거부한 데 대해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며 "정도껏 하시라.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지체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호남·경남 등지의 폭우 피해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